
-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보고서 ||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4
③ 청중토론		7
④ 마무리 말씀		8
III . 토론회 과제 및 결론		8
IV . 후속조치		9

-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 모색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3. 12. 18.(월) 14:00~16:00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 오인환 의원)
- (주 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
- (참 석) 200명(도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학생수 감소는 소규모학교(학생 60명이하) 지속 증가로 이어져 교육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소규모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수 지속적 감소
 -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저출생, 학생 수 감소, 고령화의 진행 등)가 유발한 교육적 문제 상황, 위기 지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의과정의 설계 필요
 - 미래형 교수·학습 실현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복지 등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미래형 학교 구축 필요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① 주제발표(1인)

《이영주(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

○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고민의 출발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난제임
-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향도이촌’이란 사회적 문제가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소멸은 심각한 문제임
-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과 교육 그리고 주택과 취업 등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없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교육이라는 한정된 분야로 좁혀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자 함

○ 저출생 학령인구의 감소 현황

-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실제 10년 뒤 학생 수가 절반이 됨) 여전히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지방 대학 위기, 지역 소멸 등 심각한 교육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실제 200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는 생각보다 완만했음.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2016년까지 출생아 수는 거의 40만 명대를 유지했고, 4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하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되었음. 그런데 2016년을 경과하면서 출생아 수가 매해 2~3만 명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급감하여 2022년에는 24만 9천 명까지 떨어졌음. 불과 5~6년 만에 40만 명대에서 15만 명 이상 감소한 것임. 그리고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임.

○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 학생 수 급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혹은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필요 교원을 줄이게 됨. 경제적 논리만 따지는 기재부에서 교원의 총량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교원 수 감축과 학교 통폐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차후 노동인구 감소로 귀결됨. 노동인구 감소는 줄어드는 비중만큼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든 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담은 추가로 증가할 것임

○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 학령인구 감소 시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후속 세대 전체가 노동 시장에서 퇴직한 훨씬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뛰어난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역량 또는 변혁적 역량을 키워주어야 함
- 저출생 고령화 시대, 노동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만성적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임. 지금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더해 세대 갈등과 혐오 문화가 확대되고 있음
- 민주적, 공동체적 성장과 발달은 사회적 생존과 지속에 필요충분조건임. 모든 학생들이 시민성을 갖춘 협력적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

○ 충남미래교육 2030

- 외에도 충남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

저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였음. 다
자녀 학생 교육비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정책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변화는 불가피함.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미래형 학교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복지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한 적정 규모의 미래학교를 추구하는 것임
-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평화, 환경, 인권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과 참여의 다우리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② 지정토론(5인)

① 최재훈(논산·계룡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을 계획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협력이 중요함. 미래사회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교육 위기에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의정토론회 자리를 통해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정책과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람

② 손미라(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 학부모로서 생각하는 미래학교의 발전방향은 아이들의 열정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산을 넘어 복합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에만 집중하고 있음. 아동 대상 정책 이외에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함
-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견을 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필요함
- 아이들의 열정을 확산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와 학습공간 마련이 필요함

③ 김 구(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 농촌 1면 1개 학교 유지하기도 힘든 농촌의 현실에서 광석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함. 인구 소멸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농촌일 것임. 인구 자연감소와 젊은 인구의 도시로의 유출로 인해 광석면 인구는 최근 10년간 1,200명 감소, 그 중 40%가 3~40대 젊은 층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공부방이나 돌봄시설이 없는 농촌을 떠나 사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음
- 지방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마을 거주에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커짐
- 저녁 마을안전귀가 시행, 심폐소생술 교육, 딸기체험교육, 반딧불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 학교밴드 운영 및 학교 소식 업로드를 통해 홍보함
- 늘봄교실, 저녁돌봄까지 운영해 방과 후 시스템 등 외부 홍보로

24년도 입학생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까지 거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 참여를 통해 교육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④ 이우열(논산중학교 교장)

- 낮은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젊은 연령층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논산지역 농촌사회 노령인구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나타남
-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감소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함
- 농촌교육을 자원의 부족으로 설정하고 교육복지의 시혜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관행적으로 추진해 지역 연계 공교육 프로그램이 참여 주민과 조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점과 지역사회 연계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하지 못해 아쉬움
- 농촌지역 학교만이 가지는 특장점 활용해 지역과 사회의 합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지역 소멸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및 위상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학교체제 기반을 구축해서 자율성 갖추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신장, 교원의 근무복지 개선해 지역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소멸 대응 논산계룡 지역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함

⑤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 예측 예견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위기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 모색할 것.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주도적인 적정규모학교화 준비가 필요함

- 소규모 학교가 분교화되어 적정규모학교를 위한 필수적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화가 필요하여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부적면 부적초, 감곡초, 고아석면 광석초, 왕전초 4개 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하고 있으나 의견 통합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 미래사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학교화 지속 운영, 선제적 대응 세부추진계획 추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학교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해 나갈 것임

③ 청중토론(질의답변)

<질문>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 내가 다녔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폐교에 대해 현실적인 반감이 생길 수 있음

【내동초학부모회장 강지원】

<답변>

학교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공동체의 합의 없이 학교 통폐합이 관 주도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임. 작은 학교의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실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작은 학교의 특징점을 살리고 문제점은 해결하는 최적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영주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

4 마무리 말씀

- 논산계룡에서 세종시 등지로의 자녀 학력증진을 위한 이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주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 논산계룡의 교육정책 방향이 제대로 전달되고 실현된다면 이주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자 5분께서 발표한 토론문의 내용이 모두 알차고 풍부해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미래 교육정책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마련되었음
- 토론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고 구체화해 의회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 학생 개별성에 맞춘 다양하고 혁신적인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실현 및 지속 성장하는 적정규모학교화 확산 노력
- 소규모학교의 광역형 적정규모화 및 적정규모학교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연구
- 지역 적합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 지역으로의 학습망과 안전망 확대, 학교 밖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의 상생 노력

〈결 과〉

- 저출생,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으로 인구자연감소에 기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노력
- 교육공동체의 지역적 합의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생의 학습권 확대 인식 확산
-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자 상호간, 청중과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 모색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동향 1식. 끝.

붙임 1

의정토론회 현장 사진



[단체 사진]



[인사 말씀]



[토론 모습 1]



[토론 모습 2]



[토론 모습 3]



[마무리 말씀]

2023년 12월 19일 (화)

大田日報

지역 07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서 답을 찾다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시대 미래주도형 학교 구축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시대, 충남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현황 △학령인구 감소가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충남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논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



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수 기자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내포 오광연 기자 dkh2959@dynews.co.kr

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 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

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천수 기자



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대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이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

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예슬 기자